상정된 헌법 개정안

2026년 11월 3일 선거에서 표결에 부쳐질 개정안

질문 1

투표용지 질문

버지니아주 헌법을 다음과 같이 즉, (i) 산전 관리, 출산, 산후 관리, 피임, 낙태, 유산 관리 및 난임 치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자유를 보호하고, (ii)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의사, 간호사 및 환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iii) 환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3분기 동안의 낙태에 대한 접근 규제를 허용하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합니까?

유권자를 위한 설명 - 질문 1

현행법

현재 버지니아주 헌법은 주민들에게 생식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유형의 의료 시술이나 의료적 결정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보호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정된 개정안

본 상정 개정안은 특정된 구체적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신의 생식관련 의료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버지니아주 헌법의 권리장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주 정부가 임신 3분기(third trimester)의 낙태 관련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태아가 생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해당 법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전문

[상정된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삭제된 구문구는 ~~선을 그어 표시했습니다~~.]

I 조

권리장전

11-A항. 생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모든 개인은 산전 관리, 출산, 산후 관리, 피임, 낙태 의료행위, 유산 관리 및 난임 치료와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생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집니다.

개인 생식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주정부의 중대한 공익 달성을 위해 가장 규제가 적은 수단을 사용하여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부정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Commonwealth)는 임신 3기(third trimester)의 낙태 의료 시술 제공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부는 다음의 낙태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i) 임신부의 생명 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경우, 또는 (ii) 태아가 생존 능력이 없다고 의사가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경우.

버지니아주(Commonwealth)는 이 기본권의 보호나 집행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버지니아주(Commonwealth)는 개인이 이 기본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개인의 실제 또는 추정되거나 주장된 임신 결과 즉, 유산이나, 사산 또는 낙태 등의 이유로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기소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버지니아주(Commonwealth)는 타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자신의 생식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돕거나 지원한 개인에 대하여 처벌, 기소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이것이 공인된 임상적 진료 기준 및 증거 기반 의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모색하는 개인의 건강 유지나 건강 증진을 위한 제한적인 목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해당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이는 본 조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효력을 유지합니다.

질문 2

투표용지 질문

다음과 같이 즉, (i)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ii) 성별, 젠더 또는 인종과 관계없이 두 성인이 결혼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iii) 법적으로 유효한 모든 결혼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버지니아주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까?

유권자를 위한 설명 - 질문 2

현행법

버지니아주 헌법에 따라 동성 또는 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혼, 시민 결합(civil union), 그리고 결혼과 동일한 권리, 혜택 및 효력을 갖는 기타 법적 관계는 금지됩니다. 이 금지 조항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게 되었으나, 동성 또는 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여전히 주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경우, 해당 금지 조치는 다시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상정된 개정안

상정된 개정안은 버지니아주 헌법의 권리장전에서 동성 또는 동일한 성별 간의 결혼 금지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기본권으로 대체되며, 주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성별, 젠더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두 성인 간의 모든 합법적인 결혼을 법 아래에서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주 정부가 두 성인의 성별, 젠더 또는 인종을 이유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정안 전문

[상정된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삭제된 구문구는 ~~선을 그어 표시했습니다~~.]

I 조

권리장전

15-A항. 결혼.

~~버지니아주(Commonwealth)와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하고 인정받는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어야 하며~~, 결혼은 질서 있는 행복 추구에 필수적인 중요한 개인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버지니아주(Commonwealth)와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의 형태, 속성, 의미 또는 효력에 준하는 모든 개인 간 관계에 대해 법적 지위를 창설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결혼을 하려는 성인 두 사람에게 그들의 성(sex), 젠더 또는 인종을 이유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버지니아주(Commonwealth) 및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에 부여되는 권리, 혜택, 의무, 속성 또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또 다른 형태의 결합(Union), 동반자 관계(partnership) 또는 법적 지위를 창설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주 및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두 사람 간의 합법적 결혼을 인정하며, 그러한 당사자의 성별, 젠더 또는 인종과 관계없이 법 앞에서 그러한 결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질문 3

투표용지 질문

버지니아주 헌법을 다음과 같이, (i) 버지니아주(Commonwealth) 내에서의 기본적인 투표권을 규정하고, (ii)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수감 기간 중에는 투표할 자격이 없으나 석방 시에는 자동으로 투표권이 회복되도록 유권자 자격 요건을 개정하며, (iii) 기존의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된 사람의 투표 금지에 대한 기존 규정 표현을 '투표 행위를 이해할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정된 자'로 업데이트하도록 버지니아주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까?

유권자를 위한 설명 - 질문 3

현행법

현재 버지니아주 헌법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버지니아 주지사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투표권을 회복하지 않는 한 평생 투표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범죄 유죄 판결 후 투표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은 그 능력 상실의 유형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상실하며, 이후 그 사람의 투표권은 법원을 통해서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상정된 개정안

상정된 개정안은 버지니아주 내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의 투표할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합니다. 이 권리에 대한 두 가지 예외로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사람과 법원으로부터 투표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수감 기간 동안 투표권을 상실합니다. 수감에서 풀려나면 해당 개인은 주지사에게 권리 회복을 위한 신청 없이 투표권을 다시 갖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상정된 개정안은 해당 개인의 투표권을 박탈하려면 그 사람이 투표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또한 배심원이 될 권리, 공직에 선출될 권리 및 공증인(notary public)이 될 권리도 가집니다.

개정안 전문

[상정된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삭제된 구문구는 ~~선을 그어 표시했습니다~~.]

II 조

선거권 및 선출직 공직자

1항. 유권자 자격

(a) 국민에 의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항의~~ 하부조항 (b)에 규정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본 조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버지니아주(Commonwealth)에서 투표할 기본권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주지사나 기타 적절한 관계기관에 의해 사면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투표할 ~~자격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은 해당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한 수감에서 석방되는 즉시, 별도의 조치 없이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 관할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무능력자로~~ 투표 행위를 이해할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적 능력~~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해당 무능력 기간 동안 투표할 ~~자격을~~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b) 거주 요건은 각 유권자가 버지니아주의 주민이어야 하며, 투표하는 선거구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투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모든 목적의 '거주지'란 본거지(domicile)와 실제 거처(place of abode)를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해외에서 고용된 사람과 그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해외 체류 중 버지니아주(Commonwealth) 내의 실제 거처(place of abode)에 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투표 자격을 갖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건 및 기간에 따라 버지니아주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버지니아주(Commonwealth) 내의 한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까닭으로 투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한 조건 및 기한에 따라 종전 선거구에서 계속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있어, 버지니아주(Commonwealth)로 새로 전입한 주민들을 위한 유권자 등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c) 차기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 요건을 갖추게 될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실시되는 예비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